

사냥꾼에게도 뜨거운 피가 흐를까



윤 위 중 의
잠시 쉼표

최근 흥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둘러싸고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그룹 간의 공방이 뜨겁다. 메리츠금융은 흥플러스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운영자금 지원 조건으로 MBK 김병주 회장의 개인 지급보증을 요구했고, MBK는 난색을 표하며 대립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북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MBK가 수조 원대의 펀드 수익과 수천억 원의 보수를 챙기면서도, 막상 파인수 기업이 고사 위기에 처했을 때는 직접적인 현금 투입이나 책임 있는 자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공방은 단순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에서 사모펀드(PEF)가 가져야 할 '책임 경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사모펀드는 본래 낙후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긍정적 기능을 표방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들이 즐겨 쓰는 레버리지드 바이아웃(LBO) 방식은 인수 대상 기업에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우기 일쑤다. 흥플러스 역시 인수 이후 점포 매각과 자산 유동화가 반복되면서 체질 개선은커녕 고용 불안과 기업회생절차라는 파국을 맞았다. 위험은 파인수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시장에 떠남이 고수익만 독식하는 구조, 이것이 거대 투기자본이 마주한 민낯이다.

수익 추구가 존재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역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기도 하다. 자본의 이동과 투자는 자유롭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투자의 과실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면, 투자 실패나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책임을 분담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수십조 원의 운용자산을 굴리며 전문 학적인 부를 축적한 글로벌 펀드가, 자신이 책임지던 기업의 회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에는 지갑을 닫는 행태는 결코 '합리적 투자'라는 미명 하에 정당화될 수 없다.

사모펀드의 단기 수익 극대화와 무책임한 경영 방식에 대한 경종은 이미 국경을 넘어 울리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자국 정밀공작기계 기업 마키노밀링에 대한 MBK의 적대적 공개매수에 대해 외환 및 외국무역법을

근거로 가로막았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역시 행동주의 및 사모펀드가 중장기 성장을 저해한다는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흐름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반도체·배터리 공급망의 핵심인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으로까지 번지며, 사모펀드의 무차별한 침탈로부터 국가 전략산업과 산업안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고 있다. 고려아연 노조와 흥플러스 노조의 연대 성명은 투기자본의 무책임함이 한 기업을 넘어 국가 경제의 근간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어떻게 흔드는지 보여주는 절박한 호소다.

자본은 차갑지만, 그 자본이 작동하는 사회는 인간의 삶과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된다. 사모펀드가 단기적인 엑시트만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다면, 결국 시장과 공동체로부터 외면받는 '악탈적 자본'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제 사모펀드도 사회의 일원임을 자각하고, 자신들의 투자 행위가 낳은 결과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는 구조적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정부와 입법부 역시 이들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책임 경영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어벽과 '악탈적 사모펀드 방지법'과 같은 규제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지부장 yhj@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3일 (음 5월 9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모든 것은 시와 때가 있는 법입니다. **60년생** 주의 깊은 통찰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2년생** 원하는 일은 빨리 이루어집니다. **84년생** 굳건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 49년생** 공공의 이익에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61년생** 사리사욕을 채우지 마세요. **73년생** 환경을 극복하는데 가장 쉬운 길을 택하세요. **85년생** 가족에게 배움점이 많습니다.
- 50년생** 고집을 조금 내려놓고 여진 사람과 대화하세요. **62년생** 여유를 갖고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74년생** 주관이 뚜렷하지 못합니다. **86년생** 뒷사람의 조언을 받으세요.
- 51년생** 주관을 확실하게 밝혀주세요. **63년생**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습니다. **75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87년생** 인생에 쉬운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 52년생**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64년생** 동업자에게 한발 양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76년생** 오해가 없도록 말을 조심하세요. **88년생** 일이 차차 해결 될 것입니다.
- 53년생** 모든 것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세요. **65년생**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77년생** 주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 **89년생** 안정을 취하며 조금 여유를 갖는 게 좋을 듯 합니다.
- 54년생** 결국 귀하가 하기 나름입니다. **66년생** 가족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78년생** 다른 사람들이 쉽게 따르지 못합니다. **90년생**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고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 55년생** 명랑한 마음으로 잠깐 기다려 보세요. **67년생** 외출하면 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79년생** 아랫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91년생** 언제나 말 실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 56년생** 조상을 잘 모셔야만 나쁜 일을 면합니다. **68년생** 크게 형통할 운입니다. **80년생** 귀인이 귀하를 돕는 운세입니다. **92년생** 도처에 재물이 있으니 나가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57년생** 어려움이 닥쳐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69년생** 큰 일을 꾸꾸지 말고 분수를 지키세요. **81년생**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해결책이 보입니다. **93년생** 과속에 주의하세요.
- 58년생**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는 격입니다. **70년생** 의지할 곳이 없으니 외롭고 서러운 마음입니다. **82년생** 안정을 취하고 힘을 비축 하세요. **94년생** 건강에 유의 하세요.
- 59년생** 사업을 확장하거나 투자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71년생** 귀인은 동쪽으로 가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83년생**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95년생** 밖으로 나가세요.

산업계 깊은 한숨... 노란봉투법 명확한 기준 필요해



양 성 운
(산입부)

“원청에 하청까지 1년동안 협상만 해야하겠네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잇달아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바라본 산업계 인사가 이같이 말했다. 산업계는 사용자성 인정 자체보다 그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짐작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물론 포스코, 한화오션 등 제조기업 전체가 구내식당 노동자, 공장 경비, 보안직원 등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노동당국의 판정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 15일 하청 노조 10개 지회의 교섭 요구를 공고하는 시정 명령이 내려

진 상황에서 원청 정규직인 현대차 노조는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며 파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어 포스코는 지난 17일 재심 신청 사건에 하청 노조 3곳과 개별 교섭해야 한다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초심 결정을 유지하는 답변을 받았다.

산업계는 이같은 사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하청업체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제조업 특성상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넓어질수록 동시다발적인 교섭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사실상 1년 동안 원·하청과 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 1151곳이 원청 434곳에 교섭을 요구했다는 수치는 해마다 수많은 사업장에서 이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하청업체 직원이라도 원청이 임금, 근무시간, 인사, 작업지시 등 근로조

건에 상당한 통제력을 행사할 경우 공동사용자로 인정한다. 독일과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에서 판례를 통해 공동사용자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원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노사 간 공정한 분배와 열악한 처우를 개선한다는 건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제조업 현장의 구조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점은 간과해선 안된다. 향후 원청이 사용자성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협력사 구조를 단순화하거나 기존 제조업 현장 구조를 내부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다. 또 채용 축소와 투자 유보에 이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할 경우 산업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대기업 교섭 의무가 제조 공정 외 영역으로 확산될 경우 경영계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어느선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점은 필요하다.

/ysw@

김상회의四季 정치적 달인



얼마 전 지방선거가 끝났다.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여러 가지 말을 남긴 했지만 국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할 기회를 실천했다. 살다 보면 정치는 국가경영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동서양의 역사를 되돌아보자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민심을 잘 읽으며 사명감이 있는 지도층이 있는 나라들은 부흥을 이루었다. 합일된 공동 가치관이 성립된 나라들이 의식 있는 민도를 높이면서 경제며 문화발전을 이루었다. 여기에는 비전과 식견을 지닌 뛰어난 리더, 즉 지도자가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이런 의미에서 두루두루 여러 방항에서 사람들을 순방향으로 이끌고 향상하는 분야는 누가 뭐래도 정치 분야가 될 것이다. 작은 조직이나 큰 단체든 어디에서나 지도자가 중요하며, 전근대적인 시대에서는 왕은 하늘의 명을 받은 자라는 '왕권신수설'까지 있게 된 것이다.

누군가는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 라고 하였지만, 정치(政治)란 사전적 의미로는 기본적으로 권력을 가진 지배계층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의미한다. 과거의 전통적인 전제주의 국가로부터 오늘날과 같은 시민의 정치 참여가 늘어난 다원화 시대에는 정치는 국민이 개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적, 경제적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기에 말 그대로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를 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선거일지도 모르겠다. 민주주의 근간에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나 집단 안에서의 권력 관계, 의사 결정 과정, 이해관계 조정 같은 모든 활동에 있어 지도자의 역할은 나라나 그 단체의 존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어떤 지도자를 갖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발전에 대한 비전과 추진력을 갖춘 지도자를 열망하면서 지지체장을 뽑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훈련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레코드를 추구하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5			9		7	8	1	
8					3			
1	4		2	8				
			2		6			
2		4	6		9	5		7
			5	4				
				3	5		7	2
		2						3
3	7	1		6				9

1			7		3		4	9
6		3	4	9				
							9	
8				6			3	2
	9		3		8			5
5	6			3				4
	3							
				4	7	3		5
3	4		6		2			8

6	7	8	2	9	5	1	4	8
8	9	7	1	4	8	2	6	9
2	4	1	9	8	6	9	7	6
8	1	2	9	7	4	8	9	6
4	8	9	6	1	9	7	8	2
7	6	9	8	2	1	8	9	4
9	9	6	8	2	4	7	1	8
1	2	8	9	6	7	8	4	1
1	8	4	7	6	8	9	2	5

8	4	6	2	9	9	1	7	8
9	1	8	4	7	2	9	8	6
4	9	7	6	1	9	8	2	1
7	8	2	1	8	6	4	9	9
9	9	1	8	4	8	2	6	7
2	8	4	7	9	9	6	1	8
8	6	9	9	1	8	7	2	4
1	2	8	9	6	7	8	4	9
6	7	9	8	2	4	8	9	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93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4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